

## 동아시아 맥락에서 바라본 한국에서의 위험경관의 생산

황진태\*

### The Production of Riskscapes in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A Perspective from East Asia

Jin-Tae Hwang\*

**요약 :**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위험사회 개념은 위험을 둘러싼 공간적인 감수성이 부족하면서 특정 위험이 발생하고, 전개되고, 다면적으로 인지되는 역동적인 측면들이 누락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벡의 위험사회론을 공간적으로 발전시킨 데틀레프 뮐러만(Detlef Müller-Mahn)의 위험경관(riskscape) 개념을 소개하고, 이 개념을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이론화를 시도한다.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론의 핵심적인 전제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the role of the state)'을 주문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및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은 벡의 용어를 빌리자면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덩가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만들어진 위험들(manufactured risks)'의 형성에 국가가 깊숙이 연루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근대화와 위험사회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원전입지정책을 사례로 1) 단기간에 동아시아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배적 사회세력이 지역의 위험은 축소하고, 경제성장의 가치를 지역의 위험보다 우선시하는 국가적 차원의 위험경관을 형성하였음을 밝히고, 2) 또한 다양한 우발적 계기들(정치적 민주화 혹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 등)에 의하여 다른 사회세력들이 생산한 위험경관들이 기존의 국가적 차원의 위험경관과 대립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주요어 :** 위험경관, 위험사회,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 지도화, 원자력 발전소

**Abstract :** The concept of a risk society, which was originally suggested by German sociologist Ulrich Beck, is insufficient to reveal how a certain risk materially and discursively unfolds on the ground and how its various dynamics are recognised by diverse actors because of the concept's spatial insensitivity. As an alternative approach,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riskscape, which was suggested by German geographer Detlef Müller-Mahn, and analyses this concept in the context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It is meaningful that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thesis has strongly promoted the role of the state in stimulating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underdeveloped countries. However,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an active state role in encouraging modernisation and economic growth within a very short time produces consequences of what Beck calls 'manufactured risk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analyse the state in comprehending modernisation and the risk society in East Asia. More specifically, using the case of the location policy for nuclear power facilities, this article reveals how dominant social forces acting in and through the state constructed a national riskscape that minimises the gravity of local risks while prioritising the economic value of the national economy over local risks to produce rapid modernisation. Additionally, it is argued that a dominant national riskscape may become weak from competing with different riskscapes that are constructed based on contingency factors (e.g., political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3A2044551).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Research Fellow,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dchjt@naver.com

democratisation or a natural disaster). Based on these analyses, the article emphasises that interdisciplinary research using the concept of the riskscape is required to better explain the risks in East Asia.

**Key Words** : riskscape, risk society,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mapping, nuclear power plant

## 1. 서론

2015년 1월 1일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위험사회(risk society)론을 제기했던 독일 뮌헨대 올리히 벡(Ulrich Beck) 교수가 타계했다.<sup>1)</sup> 서울대 사회학과 한상진 명예교수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벡은 2008년 첫 한국방문을 시작으로, 2014년 7월에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방문을 했다. 두 번째 방문에서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면서 국가기구의 재정비뿐만 아니라 “위험에 노출된 많은 이들의 참여가 제도화되는 것이 중요하다”(프레스리안 2014년 7월 11일)고 밝히면서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한 관심을 피력하였다. 이처럼 짧지만 강렬한 그와 한국사회와의 인연은, 그가 타계한 직후, 전 세계 지식인들이 글을 통하여 그를 추모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서울에서는 ‘위험사회를 넘어서’라는 이름의 추모식으로 종교인, 서울시장, 세월호 유가족 등이 추도사를 남기는 대중행사의 형태로 개최되었다. 비단, 그의 한국방문이 아니었어도, 이미 1990년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등의 다양한 근대화된 사고들은 벡의 위험사회론을 바탕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sup>2)</sup>

본 연구자는 앞서 소개한 벡과 한국사회와의 얽힌 인연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벡이 제시한 위험사회론이 한국사회를 이론적, 경험적, 실천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사회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국내 위험사회 연구는 위험을 둘러싼 공간적인 감수성이 부족하면서 특정 위험이 발생하고, 전개되고, 다면적으로 인지되는 역동적인 측면들이 누락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 혹은 보완적인 접근으로 본 연구는 벡의 위험사회론을 공간적으로 발전시킨 독일의 지리학자 데틀레프 뮐러만(Derlef Müller-Mahn)(2012)의 위험

경관(riskscape) 개념을 소개하고, 이 개념을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이론화를 시도한다.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론의 핵심적인 전제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the role of the state)’을 주문한다는 점이다(Johnson, 1982; Amsden, 1989; Wade, 1990; Woo-Cumings, 1999). 최근에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주도하에 시장에서 국가의 역할의 축소가 경제발전을 이끌어낸다고 보는 신고전경제학적 시각이 반영된 구조조정프로그램의 실패를 경험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국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발전국가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Mkandawire, 2001). 하지만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및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은 벡의 용어를 빌리자면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댓가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만들어진 위험들(manufactured risks)’ 또한 국가가 깊숙이 연루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근대화와 위험사회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시간에 동아시아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를 장악한 지배적인 사회세력은 지역의 위험은 축소하고, 경제성장의 가치를 지역의 위험보다 우선시하는 국가적 차원의 위험경관을 형성하였음을 밝힐 것이다. 둘째, 다양한 우발적 계기들(정치적 민주화 혹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 등)에 의하여 다른 사회세력들이 생산한 위험경관들이 기존의 국가적 차원의 위험경관과 대립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2장에서는 올리히 벡의 위험사회와 세계위험사회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3장에서는 위험사회 개념을 공간적으로 개념화한 위험경관 개념을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 이 개념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한계들도 지적한다. 4장에서는 앞서 2장과 3장

에서 논의한 위험사회와 위험경관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위험경관 개념을 이론화한다. 5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이론화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사례연구로 한국의 원전입지정책을 살펴본다. 6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하고, 위험연구에 있어서 자연-인문 지리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안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마무리된다.

## 2. 울리히 벡의 (세계)위험사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벡의 위험사회 개념은 산업사회와의 대조 속에서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홍성태 옮김, 2006). 공장에서 재화가 만들어지고, 분배되는 산업사회에서 특정 위험은 공장에서의 사고처럼 구체적인 장소에 한정되어 있었다. 재화의 생산이 우선되면서 위험은 생산에 수반된 ‘잔여적 부수효과’로 간주되었고, 그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기술-경제발전은 재화의 원천인 자연 자체마저 파괴하고, 체르노빌 원전사고나 스모그 현상에서 보듯이 위험은 더 이상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이며, 위험의 발생과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게 된 사회를 위험사회로 정의된다. 위험사회에서 계층적, 지리적 차이는 줄어들었다. 벡의 말을 빌리자면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홍성태 옮김, 2006, 77). 이처럼 산업사회에서 위험사회로 전환<sup>3)</sup>되고 있다는 벡의 시각은 본인이 밝히듯이 지극히 서유럽, 특히, 독일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홍성태 옮김, 2006, 54; 한상진, 2008, 142-143). 하지만 그의 위험사회는 유럽만을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은 아니다. 유럽의 경험에 기반한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지구화 경향을 내장하고 있”(홍성태 옮김, 2006, 77)음을 인지한 그는 자신의 위험사회 개념에 접두사 ‘세계’를 추가하면서 분석의 지리적 범주를 확장시키고자 한다.<sup>4)</sup>

벡에게 세계위험사회는 일상생활에서 점차적으로 보다 위험해지는 사실들에 근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존의 어떤 위험의 수치적 증가의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테러위험, 글로벌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의 통제할 수 없는 지구적 규모의 위험의 출현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Beck, 2002, 41). 벡은 세계위험사회를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 특성으로 요약한다(Beck, 2002, 41). 첫째, 공간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공기오염, 오존층의 구멍에서 보듯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위험들이 출현했다. 둘째, 시간적으로 보면, 핵폐기물의 방사능 반감기, 유전자조작식품의 인체효과처럼 현세대를 넘어서 미래의 후속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 잠복기를 갖고 있다. 셋째, 사회적으로 보면, 앞서 시공간적 측면과 더불어 위험에 여러 개인들이 개입하면서 위험이 누구에 의하여 야기되었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지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벡은 이렇게 통제가 어려운 위험들은 특정 장소에 귀속되지 않으면서, 기존 국민국가가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본다(Beck, 2002, 47). 지리학적 시각에서 보자면, “벡의 ‘세계위험사회’에서 위험은 시공간적 관점에서 재해의 예측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지구적이다. 다시 말해서, 벡이 말하는 세계위험은 장소와 시간이 없다”(황진태 옮김, 2014, 292)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벡의 텍스트를 좀 더 면밀히 읽으면 그의 세계위험사회 개념을 비공간적이라고 서둘러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벡은 이미 『위험사회』에서 위험사회에서의 위험이 산업사회의 위험 간의 차이를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지구적 위험은 제1세계와 제3세계 간의 ‘국제적 불평등’으로서 불균등하게 존재한다는 공간적 차별성도 인식하고 있었다(홍성태 옮김, 2006, 82-89). 그는 대표적인 지구적 위험중 하나인 기후변화도 기존의 중심국과 주변국간의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지구적 수준의 위험인 기후변화를 중심국과 상위계층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적”, 보편적이라고 본다(Beck, 2010a, 258).

이처럼 벡이 산업사회에서 출현하지 않은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위험들의 증가에 주목하는 것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벡을 객관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위험에 대한 객관주의적 접근은 자연의 위험들을 계산될 수 있고, 기술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재(reality)로서 간주한다. 한편, 구성주의적 접근은 인간의 외부에서 위험이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와 행위를 통해서 위험이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황진태 옮김, 2014). 앞서 언급했듯이 백이 체르노빌 사건 등을 경험했던 1980년대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는 이를 산업사회와 다른 논리가 작동하는 위험사회로 규정한 것인데, 노진철(2004b, 102)에 의하면, “유감스럽게도 백은 ‘위험사회’ 개념의 내용에 대한 적절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지 않은 채 자연과학적-기술적 진보의 위협적인 결과를 극적으로 표현할 목적으로 일련의 위해사태들에 대한 서술에 집착”한 “위험-객관주의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백은 이미 위험사회(홍성태 옮김, 2006)에서 실재로서 나타나는 위험(객관주의적 접근)과 “미래에 닥치게 될 위난으로 예상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으로 조장”되는 위험(구성주의적 접근)의 양 측면을 동시에 보고자 했다(홍성태 옮김, 2006, 73-74). 백은 자신의 위험사회 체계를 재평가하는 글에서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는 신념의 문제가 아니며, 기존의 사회 개념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현상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한 “실용적 선택의 문제”라고 반박한다(Beck, 2006, 62).

국내 위험사회 논의에서는 『위험사회』(홍성태 옮김, 2006)의 출간 이후의 백의 해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노진철(2004b, 102)은 백을 위험-객관주의자로 규정하는 초기 비판을 반복하면서, 백이 위험을 구성주의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국내 위험사회 논의를 이끈 핵심문헌인 한상진(1998)에서는 백의 해명이 담긴 글(Beck, 2006)의 미발표원고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위험은 실재하지만 동시에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한상진, 1998, 5)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진철(2004b)의 글에서는 한상진의 논문을 연구목표에만 기입하고, 여전히 백이 위험-객관주의자라는 허수아비를 세우고 있다.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박사지도학생이었던 노진철은 루만(Luhmann, 1991)이 인간의 결정에 귀속되는 위험(risk)과 인간의 결정과 무관하게 발생한 자

연재해를 위해(danger)로 구분한 것을 백의 위험사회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 설정한다. 백은 스스로 밝히듯이 루만의 텍스트를 “극도로 복잡한 주장”(Beck, 2010b, 177)을 “단순히 요약한”(Beck, 2010b, 177) 수준이지만, 백도 루만의 구분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노진철은 백과 루만의 논의를 불필요하게 대립적인 구도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백은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접근을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다고 말했지만, 다음 장에서 다룰 위험경관 논의에서 보듯이 위험의 공간성의 측면에서 이 두 접근은 상호배타적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백은 세계위험사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의 산물로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에 관심 갖게 된다. 백은 『위험사회』(홍성태 옮김, 2006)가 출간된 이후,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한 위험사회론이 사회현상들을 국경 안에서 발생하고, 국가를 중심으로 바라보려는 방법론적 국가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라는 영역적 함정에 빠져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대안으로서 국가를 분석의 중요단위로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스케일과 이것이 국가와 맺는 관계에 주목하는 ‘방법론적 세계시민주의(methodological cosmopolitanism)’를 제안한다(Beck, 2002, 51-54). 백은 지구적 규모에서 작동하는 위험들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초국가적인 위험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국경에 갇힌 국민국가의 역량의 한계를 넘어서 국가들 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초국가적인 국제적 수준의 기구와 조절(regulations)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 스케일과 글로벌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백의 세계위험사회 논의가 비공간적이라고 매도하기 보다는 백이 글로벌한 것을 로컬한 것에 비하여 선형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전제하는 ‘글로벌-로컬 이분법’에 빠져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끌어낼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글로벌-로컬 이분법이란 로컬의 공간은 고유하고, 맥락적이고, 우발적이라면, 글로벌의 공간은 일반적이고, 법칙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묘사/전제하는 사회과학 일반의



인식론을 지칭한다(Sayer, 1991). 즉, 백은 위험의 지역적 차별성을 인지하더라도, 지구적 규모에서 작동하는 글로벌한 힘이 로컬에 일방적, 하향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로컬은 그러한 글로벌한 위험이 발현되는 배경막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검토할 위험경관 개념은 글로벌-로컬의 이분법을 벗어나서 어떻게 글로벌한 요인과 로컬한 요인들이 상호 변증법적으로 맞물리면서 위험(경관)을 역동적으로 생산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정리하면, 백의 위험사회 개념은 기존의 산업사회를 설명하는 부의 분배(“나는 배고프다!”)의 논리보다는 위험의 분배(“나는 두렵다!”)의 논리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의 양상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홍성태 옮김, 2006, 98). 백의 위험사회가 국내 학계에 처음 소개된 1990년대는 한국사회가 성수대교(1994년), 삼풍백화점(1996년) 붕괴 등의 일련의 대형사고들을 경험하면서 국내 학자들로 하여금 백의 위험사회 개념을 활용하여 ‘위험사회 한국’을 효과적으로 설명한 의의가 있다(박희제, 2014, 101). 하지만 그의 분석은 위험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글로벌한 힘은 필연적이고 로컬은 우연적으로 묘사하는 데 그치면서 위험(경관)이 구성되는 역동성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백이 위험-객관주의자라는 과도한 비판을 생산적 논의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공간적인 사고를 그의 논의에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 다룰 위험경관 개념이 그러한 대안 중 하나다.

### 3. 위험경관 개념의 의의와 한계

백의 위험사회 개념에 내포된 비공간성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테레프 뮐러만과 조나단 에버츠(Jonathan Everts)는 위험경관(riskscape) 개념을 제시한다(Müller-Mahn and Everts, 2012). 이 개념은 어떻게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위험에 대한 각자 고유한 시각들을 만들어내고, 그 시각들을 공간적으로 해석하는지를 밝히고자 고안되었다. 위험경관은 영역(terri-

tory) 혹은 경관(landscape)이 위험과 결합된 은유적인 의미를 내포한다(Müller-Mahn, 2012, xviii). 즉, “위험경관은 실제 위험들(real risks)의 물질성(materiality)과 그러한 경관에서 살고 있고, 일상의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지각, 지식 그리고 상상을 드러내는 위험들과 상호작용하는 다층화된 경관들로 이해될 수 있다”(Müller-Mahn, 2012, xviii).

뮐러만과 에버츠는 위험경관을 개념화하면서 세명의 사회이론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이하 Müller-Mahn and Everts, 2012, 24-28).<sup>5)</sup> 첫 번째로 아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의 ‘스케이프(-scape)’ 개념이다. 아파두라이는 영역적으로 고착화되었던 세계가 지구화가 심화되면서 탈영역화된 세계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예로써 다섯 가지 스케이프(민족경관(ethnoscapes), 미디어경관(mediascapes), 기술경관(technoscapes), 금융경관(financescapes), 이념경관(ideoscapes))를 제시하였다(Appadurai, 1996). 아파두라이에게 다섯 스케이프의 공통된 접미사 스케이프는 단 하나의 시각에서 동일하게 보여지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관계가 아니라 상이한 행위자들의 역사적, 언어적,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역동적인 구성물을 가리킨다. 아파두라이의 스케이프 개념을 차용하여 위험경관과 관련한 두 가지 함의를 살필 수 있다. 첫째, 위험경관은 특정한 관점들(points of view)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바라보는 땅은 같더라도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 땅을 이해하는 바는 다를 수 있다. 즉, 하나의 경관은 없으며 복수의 경관(multiple landscapes)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위험경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시각과 위험에 따라서 복수의 위험경관이 존재한다. 둘째, 상이한 행위자들과 관점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위험경관들은 서로 부분적으로 겹치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연결이 되며, 동시에 위험의 논란을 야기하는 사회공간적인 이미지가 된다. 아파두라이에게 의미 있는 현상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것에서 찾던 것과는 달리 뮐러만과 에버츠는 위험경관의 생산에 있어서 집단뿐만 아니라 개인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위험경관도 주목해야함을 역설한다.

이처럼 스케이프에 내재된 사회적 특성은 두 번째 이론가인 테오도르 샤흐키(Theodore Schatzki)의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 논의로 구체화된다. 샤흐키는 모든 사회현상은 인간의 행위가 우선한다고 본다. 공간이나 사회는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 (재)구성되는 것이다(Schatzki, 2010). 위험경관도 마찬가지로 상상된 세계 혹은 행위자들의 상상 속의 단순한 재현(representation)이 아니라 실행을 통하여 창조되고,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실천에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상이한 경관들이 나타나고, 위험경관들도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기존 위험사회론에서는 위험의 사회적 구성에 있어서 전문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쥐고 있는 전문가 집단 혹은 주류언론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문가 집단인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은 전문가 집단이 생산한 지식의 피동적 수용자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위험경관 개념은 기본적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공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위험에 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지식(지역 지식 혹은 내생적 지식)을 통하여 나름의 위험경관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본다(Gaillard and Mercer, 2013).

이처럼 위험을 바라보는 다양한 경관들에 대한 인식은 위험 자체의 다원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으로 이어지며 마지막 이론가인 발레리 노베펜버(Valerie November)의 '위험의 공간성(spatialities of risk)'에 주목한다. 기존 위험사회 연구는 현 사회가 핵발전부터 기후변화까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였음을 밝혔다. 하지만 발레리는 첫째, 동일한 주제 혹은 동일한 장소로부터 발생한 위험의 다양성(multiplicities of risks)과 둘째, 어떻게 다양한 위험들이 한 장소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음을 지적한다(November, 2008). 가령, 홍수가 특정지역에 발생했을 때 개별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지식에 기반하여 상이한 개별 위험들(가령, 전염병, 토사붕괴, 상하수도 침수, 범죄율 증가 등의 개별적 위험들)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들의 고유한 위험경관들을 생산하게 된다.

이상의 위험경관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뮐러만과 에버츠는 에티오피아의 아파르(Afar) 지역에서 발생한 기근 사태를 살펴본다(Müller-Mahn and Everts, 2012, 28-35). 지방정부나 구호 전문가들은 기근 사태의 원인을 지구적 기후변화의 맥락과 연결하여 최근의 심각한 가뭄주기가 돌아온 것과 부족한 식량공급을 제시한다. 반면, 아파르 지역 부족의 일원들은 이들 전문가들의 시각과 차이가 있다. 최근의 가뭄과 부족한 식량공급도 연관되지만 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토지와 수자원 이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박탈로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오랫동안 주변 부족과의 분쟁으로 자신들이 소유했던 목초지를 빼앗겼고, 둘째, 정부와 국내외 자본들이 소유한 대규모 관개 농업이 확장되면서 토지의 소실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 끝으로 한 침입종<sup>6)</sup>의 서식이 아파르 지역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목초지가 줄어들기도 하였다. 이 사례를 통하여 상이한 정보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행위자들은 각자의 고유한 위험경관들을 생산하고, 이들 경관들은 부분적으로 겹치기도 하지만 충돌하며,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험의 논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부족들 간의 권력관계, 사회와 자연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위험경관을(재)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상 논의한 뮐러만과 에버츠가 제시한 복수의 위험경관(multiple riskscapes)의 존재를 인식하고, 상이한 위험경관들로부터 발생한 대립들을 시각화하고,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위험연구에서 지리학의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위험경관 개념을 본 연구의 초점인 동아시아 발전국가 논의에 적용하기 전에 위험경관 개념에 내재된 몇 가지 한계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첫째, 대립되는 위험경관들의 병렬적 배치를 시각화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특정 위험경관이 어떻게, 왜 다른 위험경관보다 인식론적으로 지배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지 주목해야한다. 위험경관은 개별 행위자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지식과 위험을 맞이한 경험에 근거하는 순수한 사고(思考)실험의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특정 사회세력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특정 위험경관을 생산함으로써 다른 위험경관을 생산하는

행위자들마저 자신들의 지배적 위험경관으로 인지하도록 동원하는 수단이자 결과물일 수도 있다. 루만이 위해와 위험으로 나누어 위험이 의사결정을 통하여 구성되는 측면을 강조한 것에 백도 동의했지만 ‘누가’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루만이 충분한 답을 구하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도 이러한 필자의 문제의식과 연결된다(Beck, 2006, 65). 마찬가지로 샤프키가 강조한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위험경관이 구성될 때 그러한 실천, 행위 자체의 효과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특정한 실천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추적해야만 상이한 위험경관들 간의 경합을 보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푸코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위험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백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위험을 특정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통치하려는 아이디어, 실천, 지식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Stanley, 2005; 2013; Dillon, 2008). 필자는 위험 개념이 객관주의나 구성주의나를 따지는 것과 구성주의를 비판하면서 위험을 아이디어로 바라보는 푸코식 이해가 보여주는 통찰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처럼 위험을 ‘모 아니면 도’로 재단하는 것은 관련 논의를 생산적으로 전개시키지 못한다고 본다. 여기서는 위험 개념을 둘러싼 논쟁에 주목하기 보다는 특정한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다는 위험경관 개념으로도 푸코식의 지식으로서 위험의 측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위험경관의 생산에 있어서 물질성에 대한 개념화가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지구적 재난이 급증하더라도 “위험은 여전히 물리적 세계에 착근되어 있다”(Müller-Mahn and Everts, 2012, 35)는 뮐러만과 에버츠의 주장처럼 위험에 경관개념을 접목한 것은 위험에 내재한 물질성과 담론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Neisser(2014, 102-103)가 지적하듯이, 뮐러만과 에버츠의 위험경관 개념은 샤프키의 실천 논의에 의존하면서 위험구성에 있어서 인간의 영향을 강조하고, 사회와 자연의 구분을 넘어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혼종(hybrid)으로서 위험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뮐러만과 에버츠가 위험경관의 사례로서 제시한 아파르

지역의 기근 사태의 세 가지 원인 중 하나인 침입종에서 보여주듯이 자연이 사회에 종속된 것이 아닌 “인간을 넘어서(more than human)”(Whatmore, 2006) 자연이 사회에 미치는 창발력에 의하여 위험이 만들어지는 측면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유사한 관점으로 Jones *et al.*, (2014)을 참조하라).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와 자연, 사회와 기술, 인간과 비인간의 선형적 분리를 부정하고, 이들 간의 끊임없는 혼종성을 강조하는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김숙진, 2010)은 위험과 재난연구에 효과적이다(Neisser, 2014; 이재열·김동우, 2004; 김나형·김숙진, 2013).

셋째, 위험경관 개념은 기존 위험사회론에서 배타적으로 규정된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적 접근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앞서 소개했듯이, 노진철(2004b, 102)은 백이 위험을 기술투입의 증가에 따라 양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인식하는 객관주의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면서, 위해와 위험의 구분과 위험은 의사결정을 통하여 결정된다는 루만의 논의를 바탕으로 위험을 구성주의적으로 이해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위험에 대한 객관주의적, 기능주의적 접근이 지배적 인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노진철이 구성주의적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공감하지만, 자칫, 인간의 의사결정만을 강조하는 것 또한 사회와 자연의 변증법을 간과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 바라볼 때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는 각각 “제한된 유효성을 갖지만, 두 관점은 상호보완적”이다(황진태 옮김, 2014, 300). 가령, von Hedemann 등(2015)은 미국 아리조나(Arizona)의 한 도시를 사례로 뇌염의 일종인 웨스트 나일(West Nile)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의 서식공간을 연구했다. 이 연구는 객관주의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모기의 서식과 번성을 예측하는 모델링 프로그램과 GIS(지리정보시스템)기법,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모기 서식을 시각화한 위험지도를 작성하고, 더불어 구성주의적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는 모집단 심층인터뷰를 시도하였다. 위험지도는 객관적 실재로서의 위험을 시각화한 것이지만, 행위자들에 따라서 지도는 상이하게 해석되었다. 공간해상도가 1m인 지도는 모기 서식의 공간적 범위가 주거

공간과 공공공간의 구분 없이 나타났다. 반면에 30m 급 공간해상도를 가진 지도는 모기 서식의 공간적 범위가 공원, 수로, 물 저장 시설 등의 공공공간에 집중되어 가리키고 있다. 정부 소속 보건전문가들은 공간해상도가 1m인 지도가 30m 지도보다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는데, 모기 서식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1m 지도는 공공공간과 함께 주거공간도 포함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시민들은 주거공간과 분리된 공공공간, 즉, 정부의 관리와 책임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는 30m 지도를 선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 행위자에 따라서 차별적인 위험경관이 구성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객관주의적 접근과 구성주의적 접근은 상호배타적이기 보다는 상보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7)</sup>

#### 4. 동아시아 맥락에서 위험경관의 이론화

본장은 앞서 논의한 위험경관 개념의 이론적, 실천적 의의와 몇 가지 한계를 밝힌 것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맥락에서 위험경관의 이론화를 시도한다.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론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동아시아 국가의 높은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논이다(Johnson, 1982; Amsden, 1989; Wade, 1990; Woo-Cumings, 1999).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으로 시장에서 국가개입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신고전경제학적 접근과는 대조적으로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에 기반한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경험은 최근 아프리카 신흥경제국의 관료, 정치인, 학자들에게 신고전경제학적,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Mkandawire, 2001). 그런데 “동아시아 경제의 기적”(World Bank, 1993)으로 불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취는 바뀌 말하면 경제적 가치 이외에 다른 가치들(예컨대, 건강, 복지, 안전, 환경, 민주주의, 균형발전 등)은 주변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Hwang(2015b, 5)은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역불균등 발전과 같은 경제적 가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환경의 지속가능성, 인권 등의 다른 가치에 비하여 우선시되는 ‘GDP주의(GDPism)’(Sum, 2013)가 국가에 의하여 확산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8)</sup> 위험과 안전이라는 가치들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한상진(1998), 장경섭(1998), 홍성태(2003), 노진철(2004a) 등의 일련의 사회학자들은 발전주의 국가의 역사적 부산물인 정경유착과 부패, 노동력과 자연 자원에 대한 착취 그리고 속도효율 혹은 ‘빨리빨리’의 멘탈리티가 날림공사를 부추기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한다. 돌진적 근대화(한상진, 1998), 압축적 근대화(장경섭, 1998; 노진철, 2004a), 폭압적 근대화(홍성태, 2003) 등의 이들 사회학자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용어는 다르더라도 이들 용어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동아시아 근대화/산업화와 유럽의 그것 간의 확연한 차이는 속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백은 산업사회가 위험사회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이는 유럽이 두 세기에 걸쳐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산업화, 근대화를 겪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시간차는 있을지라도 근대화가 지속되는 중에 ‘부를 분배하는’ 사회의 사회적 지위와 갈등은 ‘위험을 분배하는’ 사회의 그것들과 결합되기 시작했다”(홍성태 옮김, 2006, 54 밑줄은 인용자주). 즉, 백은 각 지역, 국가마다 ‘시간차는 있을지라도’ 동일한 형태의 위험사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압축성은 단순히 더 빨리 온다는 시간의 길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근대화/산업화를 약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국가와 사회는 적극적으로 위험요소들을 받아들였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시속 60km로 달릴 때보다 시속 120km로 달릴 때 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조향 장치와 튼튼한 타이어가 필요하듯이, 국가가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통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아래서 살펴보듯이 이를 체계



모니 프로젝트(hegemony project)(Jessop, 1990)라고 칭한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자동차 교통사고 처럼 국가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지역의 개인, 집단으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하면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될 수 있다(Hwang, 2015a, 1930-1931). 이러한 사유는 서구의 경험과는 차별화된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위험경관이 이론화 될 실마리를 제공한다.

국내 위험사회 논의에서는 한국의 위험사회를 서구의 '정상적인' 위험사회에 대비되는 한국적 특수성으로서 '후진성'을 강조하는 학문 오리엔탈리즘의 시각도 발견되지만(노진철, 2004b, 99-100), 이러한 시행착오는 서구 위험사회와의 비교를 통한 추상화 작업으로 연결될 활로 또한 열어두었다(가령, 백과 한상진의 대담기획(한상진, 2008)과 장경섭(1998, 382, 각주 5번) 참조). 특히, 이들 연구가 위험의 발생 원인에 기능주의적, 공학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지 않고, 한국 경제성장의 역사적, 구조적 맥락에서 구성된 것임을 밝혀냈다는 점은 의미있는 통찰이다. 그러나 사회에만 주목하는 이들 사회학 연구는 실제 위험이 발생하는 공간과 장소의 물질성에 주목하지 못하고, 관료제, 경제정책 등의 사회구조와 관료, 중앙정치인, 전문가와 같은 사회학자의 '눈에 잘 띄는' 유력한 행위자들에게만 착목하면서 위험이 발생하는 바로 그 장소, 공간에 존재하는 개인, 집단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대안적으로 위험의 공간적 측면(예컨대, 지리적 스케일에 따라서 동일한 위험을 바라보는 상이한 인식이나 위험이 발생한 장소에서의 고유한 물질성이 위험의 전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기존 위험사회론에서 보지 못하던 위험(경관)을 구성하는 사회공간적 역동성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최근의 발전주의 국가론에 대한 공간론적 해석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의 이론적, 정책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는 국가관료를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가정하는 신베버주의적 국가(neo-Weberian state)론에 기반하면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다보니 국가관료, 중앙정치인과 대자본 등의 국가스케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

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글로벌, 도시, 지역 등의 국가 이외의 스케일에서 활동하는 여러 행위자들의 영향을 간과하는 영역적 함정(territorial trap)에 빠지게 되었다(Hwang, 2015b).<sup>9)</sup> 다중스케일적(multi-scalar) 접근은 특정 스케일을 다른 스케일에 비하여 선형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가정하지 않는다(황진태, 2011; Hwang, 2015b). 이 접근에서 보자면 특정 국가정책은 사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국가관료들의 계획합리성에 근거하여 추진되기 보다는 국가 안팎으로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 상에 위치하여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세력들 간의 갈등, 경합, 타협의 과정을 통한 우연적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한국경제 발전의 중요한 물적토대인 구미공단 조성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행위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 구미였다는 정치적 논리나 산업단지의 입지를 결정하는 관료들의 계획합리성의 반영물이라는 경제적 논리 중의 어느 하나로 귀속되기 보다는 박정희와 국가관료를 포함하여 초국적 경제활동을 펼치는 재일교포, 구미지역에 장소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경합의 산물이었다(황진태·박배균, 2014).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산업단지의 조성은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단지유치를 위한 지역행위자들의 다양한 실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지역경제나 지역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담보한 국책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들의 장소의존적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지역행위자들은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가능성도 높다. 국내 진보적 사회과학자들은 1987년 민주화와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전에는 지역에서 밑으로부터의 정치경제적 힘의 존재를 간과하면서, 독재정권의 하향적 통치가 압도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하여 지역에서 발생한 정부정책에 반발하는 시위, 저항 혹은 정부와의 협상과 같은 사건들을 간과하고, 나아가 이러한 지역에서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자신들의 분석들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맹점은 위험사회

연구에서도 지속된다(가령, 홍성태(2003, 64, 68-69)와 노진철(2004a, 214-215)). 하지만 본 연구는 독재 정권 하에서 존재하던 밑으로부터의 사회-정치-경제적 힘들을 추적하는 데 방점을 둔다(황진태·박배균, 2014; Hwang, 2015a). 왜냐하면 박정희 정권이 ‘독재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의 동의를 얻기 위한 ‘헤게모니 전략’(Jessop, 1990)을 시도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의 이해관계가 투영된 특정한 위험경관의 생산을 국가 헤게모니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세계위협사회에 대한 대안적 고민으로서 백이 제시한 방법론적 세계시민주의는 기존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이 영역적 함정에 빠져있음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백은 글로벌 위협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글로벌한 힘들이 필연적으로 우세하게 작용하고, 로컬은 이러한 글로벌한 힘에 종속되고,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의하여 글로벌 위협이 지역에 따라 다소 차별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글로벌-로컬 이분법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로컬 이분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국가 이하 스케일에서의 행위자와 그들이 존재하는 장소(특히, 위협이 발생한 바로 그 장소)가 국가정책을 둘러싸고 어떻게 국가, 글로벌과 같은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 상의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위험경관이 생산되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다중스케일적 접근에서 보자면, 백의 방법론적 세계시민주의는 위험경관의 구성에 있어서 국가 이하 스케일에 위치한 행위자들과 공간적 요인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sup>10)</sup>

국가에 의하여 위험경관이 만들어지는 국책사업으로는 다목적댐처럼 특정 공간을 물리적,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급변시키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을 들 수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지탱하기 위한 공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관건이었고, 그리하여 대형 다목적댐 건설 중심의 수자원정책이 수립되었다(Hwang, 2015a). 1960년대 강원도 의암댐이 건설된 지역의 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하여 다양한 경제적, 환

경적, 사회적 위험들에 노출되었고, 보상 의제를 중심으로 약 천여 명의 주민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댐을 부숴버리겠다”(강원일보 1965년 12월 16일)면서 수차례에 걸친 투쟁을 하였다. 지역언론인 강원일보는 정권이 내세우는 구호인 ‘한강의 기적’과 정권이 표방한 ‘민주주의’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옹호하였다. 이후, 정부는 보상을 약속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지역에서의 저항이 없는 안정적인 수자원정책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communs)로서 존재하던 물을 국가소유의 경제재(nationalized economic good)로 제도적, 담론적으로 규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왔던 지역의 강들을 국가경제를 위한 ‘4대강’이라는 국가공간으로 생산한다(Hwang, 2015a). 위험경관의 측면에서 볼 때, 정권의 시각에서는 국가경제성장의 가치를 지역의 위험보다 우선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위험경관을 생산한 것이고, 지역의 시각에서는 (국가경제의 중요성을 부인하진 않더라도) 지역의 위험과 안전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는 위험경관을 구성하면서 상이한 두 위험경관이 충돌한 것이다. 결국, 물을 국가 소유의 경제재로 규정하고, 4대강이라는 국가 스케일을 생산한 헤게모니 전략은 국가 차원의 경제성장을 정당화하는 위험경관을 지배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헤게모니 프로젝트로서 지배적 위험경관의 생산은 수자원 정책에서만 예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발전국가가 추진한 다른 국가정책에서도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의 다중스케일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국 원전 입지 정책에서 어떻게 상이한 지리적 스케일 상에서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행위자들이 고유한 위험경관을 생산하고, 이것들 간에 경합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5. 한국 원전입지정책을 둘러싼 위험경관의 생산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국가경제의 성장을 뒷

받침하기 위하여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로 월성, 영광, 울진 등 4군데에서 현재까지 총 24개가 운영 중에 있다(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2016년 2월 28일 현재 기준). 해방 직후,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진영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승만 대통령도 원자력에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원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는 1962년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용 원자로가 완공된 박정희 정권에서부터였다(이상현 등, 2014, 19). 박정희 집권 직후에 세워졌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66)에서 핵발전 도입계획이 포함되었지만,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7-71)에서부터야 원전정책은 국가경제성장의 핵심적인 부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968년 미국 바텔 기념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는 공동으로 수송 및 가정연료 등의 에너지의 사용별 부문과 각 에너지의 경제성과 추세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최초로 종합적인 조사를 한 <장기에너지수급에 관한 연구조사>(한국과학기술처, 1968)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적용될 자료로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제2차 경제개발계획보다 상당히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경향신문 1969년 2월 5일).

이처럼 원전이 건설되기 전부터 장기경제개발계획에서 원전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정책을 뒷받침할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원전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원전이 건설될 입지로 고리가 선정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이상현 등(2014)은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서도(고리 지역주민들이-인용자주) 물리적 저항을 보였”지만,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었다”(이상현 등, 2014, 33)고 보았다. 이상현 등(2014)은 물리적 저항이 있었던 것은 언급했지만, 지역에서의 저항이 국가의 입지정책을 바꿀 만큼 결정적이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당시 압축적 근대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3의 불”(경향신문 1969년 5월 12일)로서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에서 첫 번째 발전소인 고리 원전의 건설은 앞으로 원전정책의 성공유무를 가늠할 시금석인 만큼 정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

다. 하지만 이처럼 원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원전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지역이 국가에 미친 영향을 협소하게 본 것이다. 아래 다소 길게 인용한 <경향신문>의 기사에는 당시 지역에서의 반발이 중앙정부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차차 구체화됨에 따라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손해보상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동래 일대의 어민들이 한전 측이 내건 보상조건에 반발, 데모를 벌였는가하면 한전 측은 원자력청의 협조로 현지에서 “원자력의 밤”이란 모임을 갖는 등 갖은 무마공작을 벌여 일단 가라앉는 듯 보이나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화력, 수력발전소와 달리 원자력발전소는 무서운 핵분열 물질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해안에 인접, 어업에 지장을 주리라는 예측이 보상문제를 까다롭게 만들어 주고 있다. 비단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력 시설에서 문제되는 것은 방사능오염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에서 보듯 인체에 막대한 해를 입힌다.… 그러나 원자력청과 한전당국은 가장 우려하는 방사능오염은 문제삼을 만큼 큰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폐기물 처리공장이 부설되기로 되어 있어 가능한 방사능 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냉각수로 쓰이는 해수에 약간의 오염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냉각수가 직접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지역 해산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또한 섭씨 약 60~70도의 냉각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이 지역의 바닷물 온도를 높이는 결과로 미역, 김 등 해조류에 지장을 주게 될 거 같다”(경향신문 1969년 2월 1일 밑줄은 인용자주).

기사에서 보듯이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정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부기구들(한전, 원자력청)은



지역에서 무마공작을 벌이면서까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신경을 쓴 것이다. 또한 원자력 기술지식을 소수의 과학자, 국가관료가 독점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기 전인 1969년에 이미 ‘무서운 핵분열 물질’과 고온의 냉각수가 지역경제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지역주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더구나, 당시로서는 발생한지 얼마 안 된 사건인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사건을 신문보도를 통하여 원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주민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sup>11)</sup> 예컨대, 아래 지도(그림 1)는 히로시마 원자탄의 5천배 위력의 수소탄이 한반도에 떨어졌을 때 입게될 화상 피해범위를 나타냈다. 일본 히로시마가 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한반도에 원자탄보다 더 가공할 무기인 수소탄이 폭발했을 때의 피해를 가정한 지도와 “한국 전체는 대략 이 수소탄 두 개면 전국민이 화상을 입” (동아일보 1954년 4월 11일)을 것이라는 예측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수소폭탄과 원자폭탄에 대한 공포를 효과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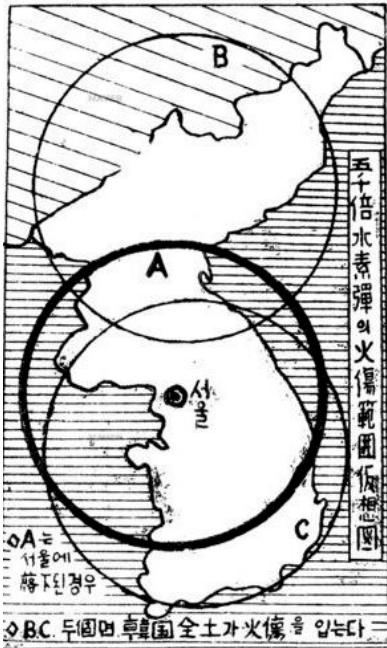


그림 1. 오천배 수소탄의 화상범위 가상도  
출처: 동아일보 1954년 4월 11일 4면

고리원전이 건설될 인근 지역은 ‘해금강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고래간이라는 1km 길이의 해변, 연간 500톤 이상 생산하는 돌미역 양식과 원전공사로 사라진 관광지로 유명한 월내 해수욕장 등이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이상현 등, 2014, 50-56; 김차웅, 2003).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시각에서 고리 원전 건설로 인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익보다는 당장의 자신들의 삶의 공간이 방사능에 오염되고, 지역 생태계가 파괴되어 지역경제가 파탄날 것을 보다 우려하는 위험경관이 형성되어 정부정책에 저항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확하다.

정리하면, 고리 원전은 여러 원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원전정책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첫 리트머스 종이였던 만큼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리 지역에서의 저항이 앞으로 다른 원전 입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보다 안정적인 원전건설을 위한 전략을 필요로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 전문가의 이해관계가 투영된 위험경관이 구성된다. 먼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특별우표를 살펴보자.

당시 체신부는 경제개발계획의 중점이 되는 두 분야를 선택하여 “온 국민이 조국 근대화를 위한 정부의 시책을 이해하고 협조가 있기를 바라”(한국우표포털서비스 2016년 2월 28일 접속)고자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sup>12)</sup> 그중 하나가 원전이였다. 체신부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는 현대과학 기술의 종합결정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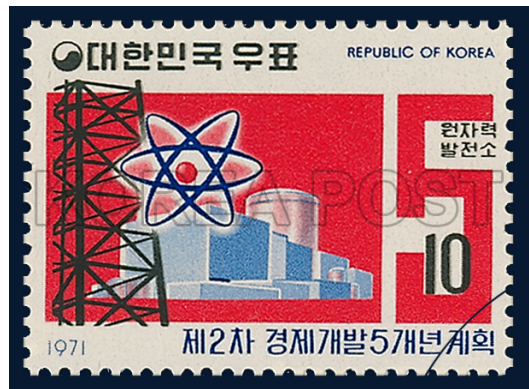


그림 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특별우표  
출처: 한국우표포털서비스



서 핵연료 1톤이 석유 5만 톤, 석탄 10만 톤에 해당하며 저장 및 수송은 물론이며 이 밖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상 이의 건설을 오래 전부터 서둘러 왔”다고 밝히고 있다(한국우표포털서비스 2016년 2월 28일 접속). 보다 구체적으로, 우표의 텍스트 배치를 살펴보자. “대한민국 우표”에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고, 완공될 고리 발전소의 모습과 원자구조모형, 송전탑이 함께 그려져 있다. 즉, 고리 발전소는 동래군 장안면 고리라는 구체적인 장소는 지워지고, ‘조국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추상적인 국가공간으로서 재현되었다. 언론 또한 정부의 시각이 담겨진 위험경관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이정춘, 1996). 가령,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방사능과 고온의 냉각수는 언론을 통하여 영국의 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수 근처에서 생식된 굴은 방사능의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맛도 다른 굴보다 더 별맛”,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수 때문에 맛도 더 훨씬 좋아진 것”(동아일보 1969년 3월 26일)이라는 정보를 유포하는 등, 국민들에게 대량으로 살포되는 우표나 신문 기사를 통하여 방사능이 지역경제 및 생태계를 파괴할지 모른다고 인지하는 지역주민의 위험경관은 주변화되고, 정부에 의하여 형성된 지역의 위험을 축소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위험경관이 지배적이게 된다.

결정적으로, 1971년 고리 1호기의 기공식에 참석한 박정희는 원전은 “공해가 없고”, “여러분의 부역이나 안방온돌도 전기가 들어가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게 될”(경향신문 1971년 3월 20일)것이라 발언하였고, 1978년 7월 2일 고리원전 1호기의 준공식에도 참석하였는데(그림 3), 언론에서는 기공발과 스위치를 누르고 폭음으로 발생한 흠먼지가 공화당의장서리의 양복에 내려앉은 것을 보고서 박정희가 “죽음의 재아니니 안심하시오”(경향신문 1978년 7월 21일; 동아일보 1978년 7월 21일)라고 말하면서 손수 털어주었음을 보도하였다. 기공식과 준공식에서 박정희의 발언과 행동은 당시 방사능에 대한 우려를 씻고, 원전이 지역에도 혜택이 갈 것이라는 인식을 심고자 한 것이다.<sup>13)</sup> 원전 앞에 세워진 기념탑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휘호로 “民族中興의 횃불”을 새김으로써 원전

을 민족/국가경제로 등치시키고자 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역대 시찰기록을 분석한 김우철(2015, 97)은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시찰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시킴으로써 통치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히듯이 이처럼 박정희가 직접 고리원전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했던 발언과 행동은 지역주민들이 당시 고리원전을 “전기를 만드는 공장”(이상헌 등, 2014, 34)이라는 인식을 현재까지도 기억할 정도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박정희 정권에서 구성된 원전의 지배적인 위험경관의 물질성과 담론성은 지속적인 원전건설과 원전만능주의를 확산하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하여 공고하게 유지되어 왔었다(김병두·윤순진, 2013). 하지만 특정한 지배적인 위험경관은 영구적으로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Müller-Mahn and Everts, 2012). 앞서 고리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반응하여 해게모니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가 특정 위험경관을 생산했듯이,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국가 안과 국가를 통하여 국가관료 및 전문가들과 결합하면서 특정 위험경관의 위상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상이한 위험경관을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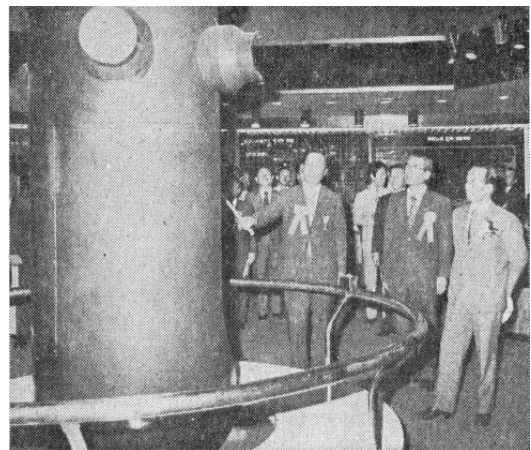


그림 3. 박정희 대통령(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고리 원전 1호기 내부를 둘러보는 모습  
출처: 경향신문 1978년 7월 21일 1면

화하는 데 탁월한 매체인 지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Müller-Mahn *et al.*, 2012, 206-207). 앞서, 3장에서 소개한 연구인 vonHedemann 등(2015)에서는 모델링과 GIS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위험지도를 제공하고, 이 지도를 통해서 개별 행위자들은 특정 위험에 대한 다양한 위험경관을 표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방사능 위험은 축소하고, 국가경제발전의 가치를 투영한 정부의 위험경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지도화(mapping)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복수의 위험경관들(multiple riskscapes) 간의 경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4는 한 언론에서 기상청과 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고서 국내 지진 진앙분포도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를 겹쳐서 만든 지도다. 이 지도는 1978년 지진 예측 이래 진도 4.0 이상의 중대형 지진의 분포가 원자력발전소 쪽에 몰려있음을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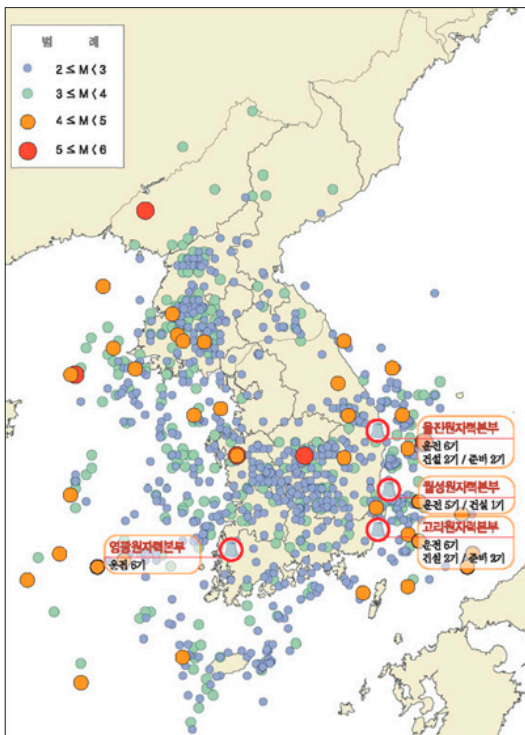


그림 4. 원전위치와 지진도를 겹친 지도  
출처: 이투뉴스 2013년 5월 27일

적으로 나타났다. 지도가 실린 신문기사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예측기술상 지진 발생 예상지역이나 지역별 위험도를 단정하기는 곤란해 단층분포나 과거 기록을 통한 지질학적 측면의 잠재 위험지역 추론만 가능하며, 중대형은 진앙지가 한반도 전역에 널리 퍼진만큼 안전-위험지역 분류는 의미가 없다는 견해”(이투뉴스 2013년 5월 27일 밑줄은 인용자주)를 밝히면서 지도에 나타난 원전위험의 지역적 차별성을 부인하였다. 반면, 동일한 지도를 보고 기사를 쓴 기자는 “국내 원전부지 4곳 가운데 울진과 영광은 비교적 지진이나 해일의 위협에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된 반면 신생대 지층이 분포한 고리나 월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특히 월성의 경우 입지상 가장 지진에 위험한 지역으로 드러났다”(이투뉴스 2013년 5월 27일 밑줄은 인용자주)면서 위험의 지역적 차별성을 밝혔다. 이 기사를 통해서 이해당사자에 따라서 동일한 지도에 대해서도 상이한 위험경관을 드러내면서(vonHedemann *et al.*, 2015), 기존의 정부와 전문가에 의하여 구축된 지배적인 위험경관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그림 4가 한국의 영토 안에서의 원전의 위험 지도를 시각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그림 5는 방사능 오염이 국경을 가로질러서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에 주목하는 기사다. 이 시뮬레이션은 프랑스의 한 핵물질감시단체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일주일간 방출된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에 어떻게 분산되었는지를 보여준 모델을 활용하여 중국 산둥반도에 건설 중인 원전의 사고를 가정할 시뮬레이션을 지도화한 것이다(오마이뉴스 2011년 3월 23일). 기사에서는 “편서풍”에 의하여 “중국발 황사”가 한국에 도달한다는 지리상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중국에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편서풍으로 인하여 한국은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이 기사는 단순히 중국 정부에 원전건설을 중단하라는 외교적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원전의 존율을 지금보다 줄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위험하니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말라’고 중국에 요구할 수는 없다. 중국의 원전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도 원전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오마이뉴스 2011년 3



그림 5. 중국 원전 사고시 방사능 확산 시뮬레이션  
출처: 오마이뉴스 2011년 3월 23일



그림 6. 동아시아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내 인구현황  
출처: 부대신문 2015년 9월 7일



월 23일)고 기술하면서 원전위험의 책임에 있어서 한국 정부도 자유롭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림 6은 그림 5에서처럼 중국과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수준에서의 원전입지와 인근의 인구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반경 30km 내의 인구현황을 측정할 근거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방사선비상 계획구역(방사능 누출사고를 대비해 대피소와 방호 물품이 준비된 구역)이 30km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원전으로부터 30km 내의 인구는 3,341만 명에 이른다. 독자들은 원전 전문가들이 제시한 위험경관인 ‘30km’라는 경계를 벗어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원전의 지리적 인접성을 하나의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자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원전 강국으로 떠오르는 사이, 아시아인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일본과 중국은 활성 단층 위에 원전이 입지해 있어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전문제를 일국 원전정책으로만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지역 스케일(regional scale)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이는 백이 말한, 국경을 넘어서는 위험에 대한 초국가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세계시민주의적 접근을 환기시킨다. 여기서 세계시민주의는 새롭게 출현하는 글로벌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근대국민국가를 무용(無用)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기존에 개별 국경 안에서만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하던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빠져있던 국가를 “동아시아”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코스모폴리탄 국가’(Beck, 2002)로 전환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별 국가의 원전문제가 아닌 “동아시아” 원전문제로서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본 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빠른 경제성장(‘압축적 근대화’)을 뒷받침하고자 지역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막고, 나아가 지역주민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헤게모니 전략의 측면에서 특정 위험경관(지역의 위험을 축소하고, 국가경제성장의 가치를 지역의 위험보다 우선시하는 시각)이 물질적, 담론적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기존의 지배적 위험경관의 우위를 흔들

수 있는 지역과 시민사회로부터의 다양한 위험경관들이 표출되었음을 확인했다.<sup>14)</sup> 특히, 지도화 기법은 위험경관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위험경관을 생산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sup>15)</sup> 더불어, 그림 4와 그림 5에서 보듯이 위험의 객관주의적 측면에서 모델링, GIS 기법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 지도를 통해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행위자들 간에 원전 위험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식으로 다양한 위험경관이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위험을 둘러싼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적 시각의 상보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그림 2의 기념우표에 대한 채신부의 설명에서 ‘현대과학 기술의 종합결정체’로서 원전은 모든 잠재적 위험들을 고려하여 건설되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판단은 앞서 제시됐던 지도들에서 보듯이 한국 국토의 신생대 지층, 편서풍, 중국과 일본 열도에 인접한 활성단층이라는 “인간을 넘어서(more than human)”(Whatmore, 2006) 자연이 사회에 미치는 창발력에 의하여 위험이 구성되는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 6. 결론: 위험연구를 자연/인문 지리학의 재결합의 계기로 삼아야

본 연구에서는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을 공간적으로 발전시킨 위험경관 개념을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맥락과 접합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위험사회론에서의 소모적인 논쟁지점이었던 위험의 객관주의와 구성주의 간의 상호배타성을 공간을 매개로 상호보완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하였고, 글로벌 위험에 대하여 글로벌 및 국가 스케일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이 발생, 전개되는 지역의 물질성과 담론성에 대한 이해와 그 위험을 전유하고, 인지하는 국가 안팎으로 활동하는 사회세력들에 주목하는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이론화를 한국의 근대화를 가능한 대표적인 발전부문인 원전 입지 정책을 사례로 삼아서 적용을 해보았다. 그 결과, 동아시아의 기적 같은 경제성장 혹은 압축적 근



대화 드라이브를 효과적으로 지탱하기 위하여 지역의 위험은 축소하고, 경제성장의 가치를 지역의 위험보다 우선시하는 위험경관이 지배적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국가관료, 전문가들에 의하여 구성된 지배적 위험경관을 헤게모니 전략의 측면에서 이해함으로써, 정치적 민주화가 실현되기 이전인 권위주의 정권시기에도 지역에서의 저항이 존재하였으며, 도리어 이러한 지역에서의 저항이 정부정책을 방해할 가능성 때문에 정부는 지역에서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잠재우고, 동시에 지역주민들을 국민이란 정체성으로 소환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특정한 위험경관을 생산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치적 민주화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역, 시민사회에서 기존의 지배적인 위험경관을 의문시하고, 자신들의 지식, 경험을 전문가들의 지식과의 결합을 통하여 그들 나름의 위험경관을 주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동아시아 맥락에서 위험경관의 이론화는 원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의 다양한 주제들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위험연구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 본 논문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위험의 특성상, 위험연구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가로지르는 간학문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특정 위험이 물질적,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기본전제는 기존에 출간된 연구물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이 가능할 것이다. 보다 본질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문은 방법론적 고찰이다. 위험연구가 학제간 연구를 필요로 하지만, 본격적인 학제간 협력에 들어가기 전에 지리학 내부에서 인문지리와 자연지리 간의 '재'결합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수차례 언급했던 "인간을 넘어서(more than human)"(Whatmore, 2006) 자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위험을 구성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사회, 물질과 담론 간의 혼종(hybrid)적인 지점을 포착하는 지리학적 감수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지리학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로 구분되어 있는 학제구성에 대한 재편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자의 문제의식은 최근 해외학계에서도 비판적 자연지리학

(critical physical geography)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Lave *et al.*, 2014; Tadaki *et al.*, 2015). 여기서 '비판적'이라는 형용사는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연지리학의 연구대상인 자연현상들이 더 이상 인간계 밖의 자연현상으로 가둬두기에는 인간이 미친 영향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비판사회이론의 수용이 필요하고, 둘째, 기존의 자연지리학 교과구성과 자연지리학 연구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인문-자연지리 간의 간학문적 요구에 맞추는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적 자연지리학의 흐름은 인문지리학 내부에서 파생된 정치생태학과와 생산적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황진태·박배균, 2013). 가령, 공간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한반도 지진분포를 분석한 박수진(2007)의 연구는 지진발생요인으로 단층선, 지체구조선에 집중했던 기존 연구를 지반운동의 공간적 분포와 운동시기에도 주목함으로써 연구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앞서 소개한 원전의 위험지도(그림 4 참조) 작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필자의 제언은 기존에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의 교과구성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개별 분과학문은 고유의 연구방법론과 이론을 발전시키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위험, 재난, 기후변화와 같은 특정 주제들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거리 좁히기'를 병행하는 것이 생산적인 재결합이다. 따라서 교과체계에 있어서도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전공자들이 위험/재난에 관한 통합적 강의를 개발하는 등의 혼종적인 지리적 감수성이 뛰어난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이 절실하다. 이렇게 육성된 지리학도가 경제학,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생물학, 토양학, 지질학, 대기학, 기상학 등을 아우르는 간학문적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학제간의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연결시키고, 통합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오늘날 위험연구에 관한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은 지리학이 겪고 있는 학문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사사

본 논문의 초고에 유용한 논평을 주신 심사자 세분과 논문작성에 도움을 준 연구조교 한윤애, 김남영에게 감사드립니다.

### 주

- 1) 본 논문의 핵심개념인 위험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사전적 정의로 위험은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음. 또는 그런 상태”(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가리킨다. 한자를 살펴보면 위태할 위(危)와 험할 험(險)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짜아지른 듯이 서 있는 험한 산”을 가리킨다(네이버 한자사전 홈페이지). 독일 사회학자 루만(Luhmann, 1991)은 인간의 결정에 귀속되는 위험(risk)과 인간의 결정과 무관하게 발생한 자연재해를 위해(danger)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여러 정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필자는 인간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특정 사건을 위험으로 인지하게 되는 사회적 구성의 측면을 위험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자 한다.
- 2) 대표적으로 1998년과 2003년에 각각 출간된 계간 《사상》과 2003년 계간 《문화/과학》 특집호를 참조하라.
- 3) 일각에서는 벡이 산업사회와 위험사회를 도식적으로 나누고, 각 사회는 다른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은 위험만 발생하는 것으로 작위적으로 구분했다고 비판하지만(대표적으로 Green(2000)) 필자가 보기에 약 200년에 걸쳐 자본주의 근대화가 진행된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적 유형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위험사회』(홍성태 옮김, 2006)에서는 개념적 차원에서 분리를 한 측면이 강하고, 경험적 층위에서는 산업사회와 위험사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가령, 홍성태 옮김(2006, 75-77, 90-92) 참조). 벡의 영역관 『위험사회』에 서문을 쓴 래쉬(Lash)와 와이(Wynne)도 “위험사회는 아직, 그리고 동시에 산업사회라고 벡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홍성태 옮김, 2006, 21). 즉, 산업사회와 위험사회의 구분이 산업사회에서의 위험이 위험사회에서는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 4) 박희제(2014, 93)가 논하듯이 위험사회론과 비교할 때 세계시민사회는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그가 발전시켜온 위험사회론의 주장 중 일부를 강조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것이다. 비록 ‘글로벌’ 위험을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 5) 뮐러만은 에버츠와 위험경관 개념을 제시하기 이전에 한

- 소논문에서 구체적인 이론화 작업은 없었지만 위험의 사회적 구성의 특성과 사회적 실천의 역할의 중요성을 시론 수준에서 언급한바 있다(황진태 옮김, 2014).
- 6) 이 침입종은 프로소피스 줄리플로라(*prosope juliflora*)라는 혁명의 콩과 관목인 메스키트 나무이다. 이 나무는 빠른 생장으로 토지를 고갈시키고, 더불어 지하수 고갈과 자생 식물 멸종 및 강한 독성으로 동물 및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연합뉴스 1997년 9월 24일).
  - 7) 객관주의와 구성주의 접근 간의 결합에 대한 고민은 궁극적으로 지리학 내부에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전략적으로 재결합한 것을 바탕으로 한 방법론적 역량을 키우는 것 과도 긴밀히 연관된다. 이는 결론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 8) 위험사회 한국을 분석하면서 장경섭(1998, 408)은 GDP에 대한 대안으로서 경제활동과 연관된 생태환경의 변화로 시민생활의 질이 달라진 만큼 국민소득이 증감되어야 한다는 녹색국민소득(Green GDP)을 제시한 바 있다.
  - 9) 본 연구의 초점과는 다소 거리가 벗어나지만, 국내 학자들 중에서는 벡의 위험사회론을 바탕으로 복지국가 만들기에 있어서 ‘위험관리자’로서 국가의 역할에 주목한 논의가 있다(김영란, 2008; 최영준, 2011). 그런데 이들 연구는 국가 자체를 관리자로서 규정하고, 국가의 안과 밖에서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영향력을 간과하는 영역적 함정에 걸려있다. 그리하여 왜 한국이 서구와 같은 복지국가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발전주의 국가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분석이 누락되어 있다. 향후 관련연구에서 이러한 누락된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서유럽 복지국가에 대한 낭만화를 피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복지국가 모델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 10) 지리학에서 벡의 방법론적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검토는 전무하다. 이 개념에 대한 지리학적 비평은 지리학의 방법론적 혁신을 위해서도 심층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황진태·권규상, 미출간).
  - 11) 동아일보 1954년 4월 11일자 “원자병이야기”라는 제목의 토막기사는 원폭에 피폭 당할 경우에 신체반응을 소개하였고, 경향신문 1961년 10월 30일자 “핵폭탄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제목의 기사는 원자폭탄의 구조와 위력을 설명하는데 신문 한 면의 3분 1가량을 할애할 정도로 비중 있게 작성되었다.
  - 12) 나머지 한 분야는 수자원정책의 핵심인 4대강유역개발 사업이었다(Hwang, 2015a, 1939). 당시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력과 원자력, 두 분야를 상당히 중시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13) 흥미롭게도 관련 보도 기사를 작성한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의 기사는 다르지만 두 기사는 동일한 원고다. 이

- 는 기사를 정부가 제공한 보도문을 그대로 베껴 쓴 것으로 보인다. 두 기사가 공통적으로 박정희의 발언인 “죽음의 재 아니니 안심하시오”를 기사제목으로 사용한 것은 정부 측의 방사능에 대한 위험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14)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및 시민사회에 의하여 만들어진 위험경관의 결과물로서 위험지도에 방점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이들 사회세력들이 어떠한 실천들을 통하여 그들 고유의 위험경관을 구성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담아내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다 (Lee *et al.*, unpublished).
- 15) 본 논문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 독도자(讀圖子)들이 전문가가 제공한 다양한 위험지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 고유의 위험경관을 생산하는지에 대한 실험조사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원일보, 1965년 12월 16일, “댐부시겠다 위험”.
- 경향신문, 1961년 10월 30일, “핵폭탄은 얼마나 무서운가”.
- 경향신문, 1969년 2월 1일, “어찌되나 災害보상”.
- 경향신문, 1969년 2월 5일, “재검토時急 에너지政策”.
- 경향신문, 1969년 5월 12일, “제3의 불 지피 10년”.
- 경향신문, 1971년 3월 20일, “朴正熙大統領은 19일 東萊古里原子”.
- 경향신문, 1978년 7월 21일, “먼지 내려앉자 ‘죽음의 재 아니니 안심하시오’”.
- 김나형·김숙진, 2013,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통해서 본 태백시 물 공급의 지리학,” *대한지리학회지*, 48(3), 366-386.
- 김병두·윤순진, 2013,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후 한국 원자력 홍보 프레임 변화,” *한국사회학회*, 2013 후기 사회학대회 자료집, 509-529.
- 김숙진, 2010,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통한 과학과 자연의 재해석,” *대한지리학회지*, 45(4), 461-477.
- 김영란, 2008,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위험관리전략 복지국가의 재설계,” *사회보장연구*, 24(1), 1-26.
- 김우철, 2015, “1970년대 대통령 시찰을 통해서 본 국가통치의 공간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차웅, 2003, *원전 속에 묻혀진 고리의 역사와 문화*, 고려동, 부산.
- 노진철, 2004a, “‘압축적 근대화’와 구조화된 위험-대구 지하철재난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61, 222-247.
- 노진철, 2004b, “위험사회화-위험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회이론화,” *경제와사회*, 63, 98-125.
- 동아일보, 1954년 4월 11일, “두개면 한국 전국토가 화상, 앞으로 만들어질 수소탄”.
- 동아일보, 1954년 4월 11일, “원자병이야기”.
- 동아일보, 1969년 3월 26일, “原子發電廢水, 굴, 放射能없고 맛좋아”.
- 동아일보, 1978년 7월 21일, “흙먼지 날리자 ‘죽음의 재 아니니 안심하시오’”.
- 박수진, 2007, “한반도의 지반운동 (II): 한반도 지진분포의 지형학적 해석,” *대한지리학회지*, 42(4), 488-505.
- 박희제, 2014, “위험사회에서 세계시민주의로,” *사회사상과 문화*, 30, 83-120.
- 부대신문, 2015년 9월 7일, “동아시아 원전 보고서, 위험은 눈앞에 있다”,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658>.
- 연합뉴스, 1997년 9월 24일, “수단, 한 관목종에 선전포고”.
- 오마이뉴스, 2011년 3월 23일, “산동반도에서 원전 터지면, 서울 상공은 ‘죽음의 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40689](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40689).
- 이상현·이보아·이정필·박배균, 2014, “위험한 동거: 강요된 핵발전과 위험경관의 탄생,” *알트*.
- 이정춘, 1996, “현대사회의 ‘위험’과 ‘위험보도의 쟁점’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37, 62-91.
- 이재열·김동우, 2004, “이중적 위험사회형 재난의 구조,” *한국사회학*, 38(3), 143-176.
- 이투뉴스, 2013년 5월 27일, “한반도 지진도·원전지도 겹친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281>.
- 장경섭, 1998, “압축적 근대성과 복합위험사회,” *비교사회*, 2, 371-414.
- 최영준, 2011, “위험 관리자로서의 복지국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론적 이해,” *정부학연구*, 17(2), 31-58.
- 프레시안, 2014년 7월 1일, “올리히 벡-박원순 ‘위험사회

- 왜 초국적 협력 필요한가”.
- 한국과학기술처, 1968, 長期에너지 需給에 關한 調査研究, 1966-1981, 과학기술처.
- 한상진, 1998, “왜 위험사회인가?,” 사상, 38, 3-25.
- 한상진, 2008, “올리히 벡-한상진: 위험사회가 여는 코스모폴리탄 전망,” 사회비평, 39, 140-155.
- 황진태, 2011, “노동자 국제주의는 만병통치약인가? 로컬공동체 노조운동의 가능성과 도전,” 로컬리티 인문학, 6, 131-172.
- 황진태 옮김, 2014, “지리학적 위험연구의 관점들,” 공간과사회, 24(2), 287-302(Detlef Müller-Mahn, 2007, Perspektiven der geographischen Risikoforschung, *Geographische Rundschau*, 59(10): 4-11).
- 황진태 · 권규상, 미출간, “방법론적 국가주의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올리히 벡의 방법론적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 황진태 · 박배균, 2013, “한국의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시론,” 대한지리학회지, 48(3), 348-365.
- 황진태 · 박배균, 2014, “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연구: 1969-73년 구미공단 제 1단지 조성과정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1), 1-27.
- 홍성태, 2003, “근대화와 위험사회,” 문화과학, 35, 54-74.
- 홍성태 옮김, 2006,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새물결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Sage, London).
- 국립국어원(<http://korean.go.kr>)
- 네이버 한자사전(<http://hanja.naver.com>)
- 한국우표포털서비스(<http://stamp.epost.go.kr>)
- Amsden, A. 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Appadurai, A., 1996, *Modernity at Larg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Beck, U., 2002, The terrorist threat world risk society revisited, *Theory, Culture & Society*, 19(4), 39-55.
- Beck, U., 2006, Risk society revisited: theory, politics and research programmes, in J. Cosgrave. Ed. *The Sociology of Risk and Gambling Reader*,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61-83.
- Beck, U., 2010a, Climate for change, or how to create a green modernity?, *Theory, Culture & Society*, 27(2-3), 254-266.
- Beck, U., 2010b, Remapping social inequalities in an age of climate change: for a cosmopolitan renewal of sociology, *Global Networks*, 10(2), 165-181.
- Dillon, M., 2008, Underwriting security, *Security Dialogue*, 39(2-3), 309-332.
- Lee, S. H., Hwang, J. T. and Lee, J. P., *Unpublished, Riskscapes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the case of location policy regarding nuclear power facilities.*
- Gaillard, J. C., & Mercer, J., 2013, From knowledge to action: Bridging gaps in disaster risk reduc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7(1), 93-114.
- Green, S., 2000, Negotiating with the future: the culture of modern risk in global financial market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8(1), 77-89.
- Hwang, J. T., 2015a, A study of state-nature relations in a developmental state: the water resource policy of the Park Jung-Hee regime, 1961-79, *Environment and Planning A*, 47(9), 1926-1943.
- Hwang, J. T., 2015b, Escaping the territorially trapped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thesis, *The Professional Geographer*, 1-7. doi: 10.1080/00330124.2015.1103657
- Jessop, B., 1990, *State Theory: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Polity Press, Cambridge.
- Johnson, C.,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y policy, 1925-1975*,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dford, CA.
- Jones, Ryan M., Lesley Instone, and Kathleen, J. Mee., 2014, Making risk real: urban trees and the ontological politics of risk, *Geoforum*, 56: 211-225.
- Lave, R., Wilson, M.W., Barron, E.S., Biermann, C., Carney, M.A., Duvall, C.S., Johnson, L., Lane, K.M., McClintock, N., Munroe, D. and Pain, R., et al., 2014, Intervention: critical physical geography, *The Canadian Geographer*, 58(1), 1-10.
- Luhmann, N., 1991, *Soziologie des Risikos*, De Gruyter, Berlin.
- Mkandawire, T., 2001, Thinking about developmental



- states in Africa.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5(3), 289-314.
- Müller-Mahn, D. Ed., 2012, *The Spatial Dimension of Risk: How Geography Shapes the Emergence of Riskscal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Müller-Mahn, D. and Everts, J. 2012, Riskscales: the spatial dimension of risk, in Müller-Mahn, D. Ed.. *The Spatial Dimension of Risk: How Geography Shapes the Emergence of Riskscal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22-36.
- Müller-Mahn, D., Everts, J. and Doevenspeck, M., 2012, Making sense of the spatial dimensions of risk, in Müller-Mahn, D. Ed. *The Spatial Dimension of Risk: How Geography Shapes the Emergence of Riskscal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89-207.
- Neisser, F.M., 2014, 'Riskscales' and risk management: review and synthesis of an actor-network theory approach, *Risk Management*, 16(2), 88-120.
- November, V., 2008, Spatiality of risk,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 1523-1527.
- Sayer, A., 1991, Behind the locality debate: deconstructing geography's dualism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2), 283-308.
- Schatzki, T.R., 2010, *The Timespace of Human Activity: On Performance, Society, and History as Indeterminate Teleological Events*, Lexington Books, Lanham.
- Stanley, A., 2005, Risk, scale and exclusion in Canadian nuclear fuel waste management, *ACME: An International E-Journal for Critical Geographies*, 4(2), 194-227.
- Stanley, A., 2013, Natures of risk: capital, rule, and production of difference. *Geoforum*, 45, 5-16.
- Sum, N.-L., 2013, Rethinking 'developmental state' via cultural political economy: neoliberal developmentalism and the case of China. *Paper presented to the 1st International Workshops on 'Geo-political Economies of East Asia'*, Seoul National University, 22 August.
- Tadaki, M., Brierley, G., Dickson, M., Le Heron, R. and Salmond, J., 2015, Cultivating critical practices in physical geography, *The Geographical Journal*, 181 (2), 160-171.
- vonHedemann, N., Butterworth, M. K., Robbins, P., Landau, K., & Morin, C. W., 2015, Visualizations of mosquito risk: a political ecology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territorialization of hazard control,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42, 159-169.
- Wade, R.,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Whatmore, S., 2006, Materialist returns: practising cultural geography in and for a more-than-human world, *Cultural Geographies*, 13(4), 600-609.
- Woo-Cumings, M. Ed., 1999, *The Developmental State*. Cornell University Press, New York.
-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Economic Miracle*, World Bank, Washington, DC.
- 교신: 황진태,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01동 308호(이메일: dchjt@naver.com)
- Correspondence: Jin-Tae Hwang, 308ho, 101d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South Korea (e-mail: dchjt@naver.com)
- 최초투고일 2016. 3. 22  
수정일 2016. 4. 19  
최종접수일 2016. 4. 25